

지역신문 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한다

-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(2023~2025), 4대 전략 21개 세부과제 발표
- ▲차별화된 지역 뉴스콘텐츠 생산 강화, ▲뉴스 제작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개발 지원, ▲디지털 시대 지역신문 성장기반 마련
- 지역대학-신문사 팩트체크 모델 구축 등 지역사회와 협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5일(금), ‘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(2023~2025)’을 발표했다.

문체부는 「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」(이하 지역신문법) 제6조에 의해 2005년 첫 번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한 이래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. 그동안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「지역신문법」이 상시법으로 전환(2022년)되었고, 언론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.

그러나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,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*하면서 종이신문의 이용률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신문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. 이러한 위기 속에 지역뉴스에 대한 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.

* ‘뉴스에 관심없다’ 응답 : 35세 미만 21%, 35세 이상 10%(디지털뉴스리포트 2022)

이에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 발행인, 언론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.

이번 지원계획은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‘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컬 저널리즘 구현’이라는 비전 아래 ▲글로컬 저널리즘 기능 제고, ▲신기술 기반 외연 확대, ▲지역사회 연대·상생 강화, ▲지역

신문발전 기반 정비 등 4개 전략, 2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지역 고유의 글로벌 저널리즘 기능 제고

문체부는 지역신문이 지역 고유의 현안을 발굴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. '22년 지역신문 구독자(2,858명)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독자들은 공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'지역밀착형 기획콘텐츠의 생산'(89.1%)이라고 응답했다.

문체부는 2024년부터 재해·재난, 경제 등 공동 관심사 관련 지역의 위기관리 대처법에 대한 취재를 새롭게 지원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심도를 높이고 문제해결을 유도한다. 공동 기획 주제를 선정 후 취재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신문사를 선발하고, 국내외 취재지원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. 또한 지역신문사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MZ세대 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과 지역언론인 교육을 지원한다.

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신문 외연 확대

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이를 활용하는 뉴스 콘텐츠 소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뉴스저작권 사업 활성화 등 지역신문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한다.

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'빅카인즈'에 뉴스기사를 제공하는 지역신문 협약사를 2024년에 50개사까지 확대하고 뉴스 이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15~25% 상향한다. 빅카인즈에 수집된 다양한 지역 뉴스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스타트업, 지자체 등에 맞춤형 정보로 제공된다. 또한 디지털·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뉴스 제작·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뉴스 자동 생성, 기사 관련 뉴스 소스, 팩트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뉴스콘텐츠를 수집·편집·생성, 송고·출고 등 관리하는 공용인프라(통합CMS)를 확대 보급한다. 지역신문사가 인공지능 기술(AI)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미디어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.

지역대학 협업 등 지역사회 연대·상생 강화

지역대학과 연구소, 단체 등 지역 주체 및 MZ세대와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지속 생산하고 지역 여론을 활성화한다. 지역대학과 신문사가 협업해 팩트체크 모델을 구축,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고, 지역의 MZ세대가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 공모전도 추진한다. 공모전 수상작은 지역신문사 광고로 게재하고 기획기사를 연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정보 취약계층의 뉴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외계층 구독료를 지원하는 한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초·중·고교 대상 지역신문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.

안정적인 지역신문발전 기반 조성

지역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. 문체부는 지역신문 관련 법·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.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상설화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사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, 평가·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.

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“2024년은 「지역신문법」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.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그동안 들인 노력과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.”라며, 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 목표를 구현하고 지원계획의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 기금 외에도 언론진흥기금,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따로 붙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(2023~2025)

담당 부서	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	책임자	과장	남찬우 (044-203-3211)
		담당자	사무관	윤은숙 (044-203-3218)

국민과 함께하는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대한민국
지식브리핑

